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섰다온 뒀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밀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국회

‘섰다운’ 국회, 결산심사 재개

“추경·재난지원금 등 재원·효과 짚어보아야”

오늘부터 ‘100일 정기국회’ 돌입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31일부터 재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출입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단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날부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교육위·기획재정부·정무위 등 상임위 7곳은 이날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이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지권에선 무조건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하지만 재원 및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경제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조선시대 상소문 형

태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무 7조를 읽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되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은 “국토부 존재 이유는 주택, 도로, 철도 등 문명을 창조하고 고도화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주력한 업무를 보면 투기꾼을 색출하는 등 타 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 경찰, 부동산 세무 당국 감독 등을 운운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8일)과 대정부질문(14~17일)에 이어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10월 7~26일)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8일)을 거쳐 11~12월 중간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경상대·전북대 2곳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기존 9개 대학에서 확대해 경상대, 전북대 등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융합 적용하고 사업화하는 석·박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산업부는 서강대, 호서대 등 수도권 중심의 7개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2개 일반대학원의 기

술사업화트랙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그간 지속적인 지역 산업계의 전문가 수요를 고려, 경상대와 전북대 대학원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두 대학원은 이에 따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문제 해결 등 실무형 인력을 집중 양성할 예정이다. 경상대는 기계·항공 분야의 스마트 제조 기술사업화 분야를, 전북대는 미래자동차, 지능형기계 분야 등의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한용수 기자 hys@

“의료계 진료거부 대단히 유감” 경고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 불안 증식에 의료계 결단 촉구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

문재인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위기 상황 가운데 의료계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국민 불안을 증식하는 의료계의 대응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300명대로 집계된 점도 언급하며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해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정무비서관-배재정, 국정홍보비서관-윤재관 내정

文 대통령, 비서관 6명 인사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내정된 인사는) 9월 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비서관에 내정된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경력이 있어 향후 당·청 소통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비서관에 내정된 윤재관 부대변인은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 한양대 겸임교수,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청와대는 또 청년 정책 전담 비서관

직을 신설하고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군적폐청산위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박진섭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환경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인사다.

장용석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안보장회의사무처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국장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노규덕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주미 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다. /최영훈 기자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해외파견 중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산업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의사 등 76건도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공단은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했으며,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

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친후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